



제306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제5차 자치행정위원회

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
[박은경 의원 대표발의]

검 토 보 고 서

2024. 9. 12.

자치행정위원회
전 문 위 원

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제안경과

- 본 조례안은 2024년 8월 23일 박은경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동일자로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젊은 군 장병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민지원을 위해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및 생명을 보호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(안 제1조~제3조)
- 나. 안전교육, 안전 장비 지원 및 상해보험 가입 등을 규정(안 제4조~제6조)
- 다. 협력체계 강화 및 위탁,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 참고자료

- 1.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현황
- 2.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관련 보도자료

나. 관계법령 : 붙임1

다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
라. 관련부서 : 시민안전관

마. 입법예고 : 2024. 8. 23. ~ 8. 29. (7일간) /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총괄하여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경기도 내 31개 시·군의 군 장병에 대하여 상해보험을 가입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남양주시에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.

최근 기후 위기 등으로 인해 재난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복구를 위한 군 장병의 지원 횟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,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교육, 안전전문인력의 배치, 안전장비 등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본 안건은 의의가 있으며,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■ 참고자료 1 : 재난 대응 및 피해복구 대민지원 현황(2018~2022년)

| 연도 | 지원내용 | 인원(명) | 장비(대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총 계 | | 2,699,121 | 171,486 |
| 2018 | 소 계 | 44,560 | 9,832 |
| | 산불지원 | 8,970 | 186 |
| | 가뭄, 집중호우, 태풍 피해 지원 | 16,125 | 8,168 |
| | 실종자 수색 · 구조 | 1,165 | 219 |
| | 구제역 · AI 방제 | 10,452 | 1,246 |
| | 폭설, 지진 피해 지원 | 7,848 | 13 |
| 2019 | 소 계 | 204,988 | 11,484 |
| | 산불, 화재 | 22,242 | 526 |
| | 폭염 · 가뭄, 태풍 · 호우, 폭설 | 64,745 | 2,319 |
| | 실종자 수색 · 구조 | 4,208 | 748(군견15) |
| | AI ·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 확산 차단 | 108,985 | 7,490 |
| | 철도 · 화물 노조 파업 관련 지원 | 3,900 | - |
| 2020 | 소 계 | 674,452 | 48,405 |
| | 산불, 화재 | 1,984 | 89 |
| | 폭염 · 가뭄, 태풍 · 호우, 폭설 | 128,699 | 17,063 |
| | 실종자 수색 · 구조 | 5,604 | 778 |
| | AI · ASF 확산 차단 | 60,161 | 6,108 |
| | 코로나19 대민지원 | 478,004 | 24,367 |
| 2021 | 소 계 | 1,111,888 | 61,108 |
| | 산불, 화재 | 1,031 | 122 |
| | 폭염 · 가뭄, 태풍 · 호우, 폭설 | 5,672 | 131 |
| | 실종자 수색 · 구조 | 5,932 | 367 |
| | AI · ASF 확산 차단 | 201,685 | 17,047 |
| | 코로나19 대민지원 | 869,120 | 43,439 |
| 2022 | 소 계 | 663,233 | 40,657 |
| | 산불, 화재 | 23,265 | 1,139 |
| | 폭염 · 가뭄, 태풍 · 호우, 폭설 | 74,469 | 4,636 |
| | 실종자 수색 · 구조 | 2,856 | 343 |
| | AI · ASF 확산 차단 | 153,431 | 28,430 |
| | 코로나19 대민지원 | 405,961 | 5,897 |
| | 화학사고, 농번기 등 | 2,833 | - |
| | 화물연대 집단운동 거부 관련 지원 | 418 | 209 |

※ 출처 : 2022 국방백서

■ 참고자료 2 :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관련 보도자료



보도자료



| | | |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----|---|
| 보도일시 | 2024.6.24.(월) 배포 즉시 | 사진 | x | 자료 | x | 매수 | 2 |
| 담당부서 | 군협력담당관 (군협력팀) | 과 장 | 홍원표 (031-8030-2550) | | | | |
| | | 팀 장 | 조영미 (031-8030-2551) | | | | |
| | | 담당자 | 이승호 (031-8030-2552) | | | | |

경기도 발생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한 장병 여러분 24일부터 상해보험 가입됐습니다

- 6월 24일부터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효력 발생
 - － 장병 거주지역 상관없이 경기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 피해 발생에 대해 최대 5천만 원 보장
 - － 가입 인원 3,200명. 보험기간 1년.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에 연락, 구비서류 확인 후 신청·접수

경기도가 도에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는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.

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‘군 장병 상해보험’ 계약을 체결했다. 이에 따라 24일부터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복구지원에 참여하다 상해를 입은 군 장병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.

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의회와 함께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‘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 조례’를 제정한 바 있다. 상해보험 가입은 조례 제정에 따른 것이다.

상해보험 가입 대상은 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현역 병사, 장교,

준사관, 부사관, 군 간부 후보생으로 가입 인원은 3,200명, 보험기간은 1년이다.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동원 중 사망, 재해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.

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보험기간 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상해사망, 질병사망, 질병 후유장해(80% 이상) 시 5,000만 원 보장과 상해 후유장해의 경우 장해 지급률에 따라 5,000만 원을 보장한다.

이 밖에도 폭발·화재·붕괴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2,000만 원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고, 중증장해 진단비 1,000만 원, 뇌출혈 진단비·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 원, 정신질환 위로금·외상성 절단 진단비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.

보험금 청구는 군 장병이 직접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전용 콜센터(070-4693-1655 / 070-8892-3786)에 연락해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하면 된다. 이후 보험약관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.

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 장병의 경우 도에서 기존에 실시 중인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을 받게 된다. 따라서 이번 재난복구 군 장병 상해보험은 다른 지역 거주자이면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재난 복구 지원 사업에 참여한 장병이 주 대상이 된다.

현재 도는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와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31개 시군에도 동일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중이다.

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“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은 위험한 재난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 및 타 시도까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”고 말했다.

☑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24. 1. 16.>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
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
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·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, 「우주개발 진흥법」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 등으로 인한 피해

다. 삭제 <2013. 8. 6.>

2. “해외재난”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.

3. “재난관리”란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.

4. ~ 13. (생략)

[시행일 : 2024. 7. 17.] 제3조
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,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,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와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39조(동원명령 등)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·군수·구청장(시·군·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.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)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「민방위기본법」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
 2.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
 3.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
-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제46조(시·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) ①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및 제39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3. 12. 26.>

1.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 2. 둘 이상의 시·군·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
- 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 절에 따라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다른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[시행일 : 2024. 6. 27.] 제46조

☑ 「병역법」

제5조(병역의 종류)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현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(兵)
 - 나. 이 법 또는 「군인사법」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(將校)·준사관(準士官)·부사관(副士官) 및 군간부후보생
2. ~ 6. (생략)
- ② ~ ③ (생략)

☑ 「군인사법」

제2조(적용 범위)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.

1.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, 준사관(準士官), 부사관(副士官) 및 병(兵)
2. 사관생도(士官生徒), 사관후보생,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
3.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

☑ 「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관리자원”이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(이하 “기본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(이하 “재난관리”라 한다)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, 재산 및 인력 등 물적·인적 자원을 말한다.
2. “재난관리물품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재난관리 자원으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.
 - 가.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- 나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
 - 다.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3. ~ 10. (생략)

☑ 「군인 재해보상법」

제4조(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) ①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. 다만,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

1. 공무상 부상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(이하 “공무상 사고”라 한다)로 인한 부상
 - 가.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 - 나.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

다.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2. 공무상 질병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

가.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·화학적·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

나.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·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다.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

라.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

3.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

4. 공무상 사망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

가. 공무수행 중 사망

나. 공무상 사고로 인한 사망

다.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

② 군인이 고의로 부상·질병·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. 다만,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고의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.

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군인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.

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이나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. 다만,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.

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, 성별, 나이, 체질, 평소의 건강상태, 기존의 질병 유무, 병가, 휴직,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2(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)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군인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·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, 구체적인 질병명,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16.]

[시행일: 2025. 1. 17.] 제4조의2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

○ 남양주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나. 재정수반 요인

○ 제4조(안전교육) ①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.

1. 군부대
2. 소방서
3.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
②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군 장병의 관할 군부대와 협의하여 안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.

○ 제5조(안전 장비 등 지원) 시장은 재난복구 현장에서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재난관리물품
2. 간이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
3. 군용 장비의 유류비
4. 식비 등의 일부
5. 그 밖에 군 장병의 안전 및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

○ 제6조(상해보험 가입) ① 시장은 재난복구지원을 위해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.

1.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자
2.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자
3.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

② 제1항에 따른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보장내용 및 금액 등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2. 미 첨부 근거 규정

- 「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운 경우

3. 미 첨부 사유

- 제4조 관련 : 군장병의 안전교육은 관할 군부대에서 정기·수시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, 시장이 군부대와 협의하여 군장병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없음에 따라 현재시점에서 교육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곤란함
- 제5조 관련 : 안전장비 등은 재난유형별로 각 소관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며, 시민안전관에서는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재난 발생의 시기 및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에 따라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곤란함
- 제6조 관련 : 경기도에서 총괄하여 경기도 내 31개 시·군의 군장병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

4. 작성자

시민안전관 이명구